
일본 공동육아(탁아)제도의 정치화¹⁾

정병호*

1. 머리말

일본의 초기 사회화(문화화)에 대한 전통적 인류학적 연구는 가정 안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아기 경험에 주목하여, '어머니와

*연세대 강사

- 1)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탁아'라는 용어 대신 '공동육아'라는 용어를 썼다. 이 용어는 1990년 8월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탁아(아이를 맡긴다)'라는 말에 포함된 어린이를 물화하는 사고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군국주의 '전시탁아소'가 성행하던 통제적 기능을 비판하며 '탁아' 대신에 '보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 일본에 관한 서술에서는 '보육', '보육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아이의 공생관계'(symbiosis)(Caudill and Weinstein 1969)를 통해 '의존과 외로움을 감각화'(Lebra 1976)한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내면화된 '독특한 심리적 의존관계'(아마에 : 甘え)(Doi, 1971)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일본인의 일반적 행태패턴을 정형화하였다. 초기의 '문화와 인성'(culture and personality)연구, '민족성'(national character)연구, 보다 대중적인 '일본인론'(nihonjinron)에 의해 되풀이 강조된 이러한 보편적 유아기 경험에 대한 인식은 일본사회에 대한 지배적 이미지 즉, 민족단위의 동일한(homogenous) 사회문화체계,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 남녀 성별분업의 정형성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 일본사회의 대규모 종일 공동육아제도의 존재는 이러한 일본인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즉, 전형적인 전업 가정주부가 아닌 사회적 노동인력으로서의 기혼여성의 존재, 생물적 공생관계(symbiosis)로까지 규정된 모자관계를 대신하는 사회적 공동육아방식의 보편화, 심리적 의존의 내면화와는 전혀 다른 사회화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보육원(호이꾸엔: 탁아소)의 많은 어린이들은 그동안 일본사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강조되어 온 '공식적 문화표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폭넓은 사회집단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조급한 일반론의 추구과정에서 나타나고 강화된 동일성(homogeneity)의 신화 밑에 실재하는 다양한 가치관, 생활방식 그리고 그들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통해 현대 일본의 사회문화 현실이 빚어진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육아제도의 성립과정에 그러한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정치화되어 영향을 미쳤고, 이 제도가 빚어낸 사회적 공동육아방식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또한 이 제도의 프로그램 안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정치적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육아제도의 성

격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간단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의 공동육아제도는 기혼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응방식의 결정, 조절은 정부의 정책, 재정지원 등의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결정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로서, 육아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어머니들은 저소득 노동계층이 주류를 이루므로 이들의 필요를 누가 어떻게 인식하여 대변하는가 하는 것도 주요한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다.

더욱이 공동육아제도란 낮은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문화적 기본문법(말, 몸짓, 식성, 느낌, 인간관계, 상호작용 등)을 몸으로 익히는 곳으로서 이전에 개별 가정과 지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초기 사회화의 상당 부분을 공적이고 집단적인 제도적 상황으로 이전시킨다(정병호 1991). 즉 공동육아시설은 공식적 기구로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배권력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제도를 통한 획일적 초기 사회화와 사회적 통제방식이 낮은 연령층에 까지 확산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현대 일본의 보육원에서 정형화된 생활모습이 이미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이에 저항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집단적 실험도 또한 폭넓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정치적 의미와 연관지어 밝히고자 한다.

2. 일본 공동육아제도의 현황

198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은 22,899개소의 인가받은 보육원에서 약 2백만에 가까운 영·유아의 종일보호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4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의 약 30%와 2~3세 유아의 약 17%, 그리고 1세 미만의 영아의 4.4%가 종일공동육아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幼兒保育研究會 1989; 全國保育團體聯合會 1989). 이에 포함되지 않은 2,500개소로 추산되는 무인가 비영리 공동육아시설과 약 450개소로 조사된 무인가 영리보육시설인 ‘베비 호텔’ (baby hotel)가 보육하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영·유아들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의 사회적 공동육아시설이 담당하는 초기사회화과정의 폭은 서구 산업사회에 비교해 보아도 그 규모와 질의 면에서 상당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규모의 공동육아제도를 비슷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비교해 보면, 현대 일본사회에 있어서 이 제도가 담당하는 사회적, 인류학적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유치원과 보육원은 법령에 명시된 목적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의거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서 그 심신의 발달을 도와(조장하는) 주는 것<學校教育法 제 77조>”이 목적인 데 비해, 보육원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하루하루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이 부족한(호이꾸니 카게루: 보육이 결여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이 그 법적 목적이 되어 있다. 대상아동은 유치원이 “만 3세 이상 취학할 때까지의 유아”인 데 비해 보육원은 “보육이 부족한 1세 미만의 영아부터 학교에 다니는 소년에 이르기까지”이다. 여기서 “보육이 부족한”이란 추상적 표현은 현실에 있어 “시정촌(市町村: 시초오손)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이 부족한’ 영·유아를 보육원에 조치(조치)할 의무가 있다(兒童福祉法 제24조)”고 규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취업주부(전업 가정주부에 대응하는 개념)의 아이들이 보육원의 주대상아동이 되도록 했다. 즉 유치원과 보육원은 기대되는 사회적 기능에 있어 명확하게 구분되는바 각각 ‘발달’과 ‘보호’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아동의 사회적 범주도 뚜렷하게 나누고 있다. 묵시적으로 법령은 유치원의 추가적(supplementary) 교육적 성격과 보육원의 보충적(complementary) 사회적 필요성을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법적 바탕 위에서 공공의 책임부

분과 재정지원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유치원이 부모의 직업,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주로 오전중의 3~4시간) 일정한 교육비(등록금, 교재비 등)를 받고 있는 데 대해, 보육원은 부모의 소득과 대상아동의 연령, 추가적 보육시간에 따라 무료에서 유치원 교육비의 3~4배까지 차등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모에게 보육료를 징수하고 부모들이 낸 보육료의 총액으로 충당되지 못한 부분(지방에 따라 차이가 크나 대개 공동육아제도 유지비용의 약 반 정도)의 80%를 중앙정부가, 10%를 현(縣: 켄)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10%를 시읍면의 지방자치정부가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public)의 공동육아제도에 대한 개입, 지원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공동육아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포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공동육아제도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제가 일본의 산업발전과 팽창하는 사회적 부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달되었다고 간단히 추측해 버리는 것은 대단한 오류이다. 더욱이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적 공동육아제도가 일본의 모든 일하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똑같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사회를 동일한(homogenous) 단위로 보는 지배적 이미지와는 달리, 초기 사회화과정에 대한 지역적 대응방식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다음의 그림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1989년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약 95%)의 4세, 5세의 일본어린이들이 유치원(65%)과 보육원(30%) 어느 한 곳에서 취학전 초기 사회화 경험을 하고 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제도적 사회화과정은 아직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현대 일본사회는 고등학교처럼 하나의 필수적인 교육적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방에 따라 현격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보육원과 유치원이 각각 표방하는 이분화된 공식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보면 90% 이상의 유치원 의존도를 보인 오끼나와현과

〈그림 1〉 5세 아동의 재적률을 통해 본 유치원과 보육원의 비교
보육원과 유치원의 비교
(재적률을 통해본 비교)

70% 가까운 보육원 의존도를 보인 나가노현의 차이는 지역에 따른 현실적 필요성의 차이 정도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현대 일본사회의 제도적 초기 사회화과정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면 주로 어떠한 사회적 변수가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을 빚어 내었는가? 공동육아제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자.

첫째, 일본의 보육원은 사회복지적 측면의 종일공동육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반일제나 시간제 취원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대상아동의 부모(특히 어머니)는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혹은 그에 상당하는 사회적 노동(자영업, 농업, 어업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 <그림 1>에서 보육원제도에 5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인 7개 현과 유치원제도에 8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인 3개 현이 모두 농업, 어업에 주력하는 지방임을 볼 때 부모의 취업 특히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법적 적용이 지역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차라리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각 지방 정부의 문화적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공동육아제도의 규모와 이러한 다양한 행정적 해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보육원의 설비와 운영이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공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때, 한 지역의 공동육아제도의 확보 정도에 따라 그것이 하나의 현실적 조건을 형성하여 차후에 유치원에 대한 의존도를 결정했다고 하겠다. 유일하게 보육원에 대한 10% 미만(유치원에 대한 90% 이상)의 의존도를 보인 오키나와현의 예가 위의 사실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준다. 미국에 의한 오랜 점령기간(1945~1972) 동안 오키나와는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보다는 미국본토에서와 같이 보육을 자유시장 기능에 맡겨 영리적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팽창한 일본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의 영역 밖에 있었던 오키나와현의 이러한 공공보육시

설의 상대적 빈곤은 유치원에 대한 절대적 의존상황을 빚었다. 그 결과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잠재적 필요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인가 영리보육시설(베비호텔루)에의 높은 의존도로도 나타난다(保育問題をすすめる會, 1974). 다시 말해서 각 지역에 있어서의 공동육아제도에 대한 공공투자의 규모는 유치원 보급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그러한 공공투자는 어떤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각 지방에서 공동육아제도에 대한 공공투자 규모는 흔히 연상할 수 있는 공동육아제도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 필요성(산업화·도시화 정도, 확대가족에 대한 핵가족 비율, 전업주부에 대한 취업 기혼여성의 비율 등)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호와 교육으로 이원화된 공식적 목적과는 별개로 지방단위의 현실에 있어서는 종일보육원이 취학전 아동교육기관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될 때에는 취업부모의 아동들의 종일보호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확대가족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공동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조부모의 육아기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하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도시의 확대가족 중에서도 조부모에게 육아를 의존할 수 없다는 수많은 취업주부들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현대 일본사회에서의 육아는 폭넓은 지역과 사회집단에서 이미 사적인 영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공적인 사회적 장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육아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민들의 육아에 대한 의식변화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나타났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치적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보육원에 대한 정치적 결정, 재정적 지원의 규모가 어떻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초기사회화과정의 현실을 빚었는지 일본의 공동육아제도의 역사적, 사회

적 진화과정과 결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자.

3. 일본의 공동육아제도의 정치화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공동육아제도는 그 발생기부터 유치원과는 대별되는 사회계급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최초의 유치원이 상류층 자제의 조기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적 시범사업이었던 데 반해 보육원은 빈민구제를 위한 자선적 사업적 의미가 뚜렷이 강조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난과 국가적 위기상황 특히 전쟁기에 기혼여성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대규모로 활용되었고, 특히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극성기인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범국민적 단합을 위해 상류층 지향의 유치원의 발달이 억압되고 보다 보편적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탁아소’(戰時託兒所: 센지 타꾸지쇼)제도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다. 군국주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전시탁아소’에서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주입 및 지배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추진되었는데, 國家神道の 종교적 의식, 천황에 대한 공경, 군대와 전쟁에 대한 일체감 조성 등의 시대적 특성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보다 본질적인 집단적 생활훈련 즉 질서훈련, 예절교육, 바른 자세, 말법의 강조 등을 통해 의무교육기관의 사회화기능을 모방한 여러 가지 집단적 표준적 초기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었다(白峰學園保育センター 1987).

패전 후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일본의 공동육아시설은 승전국인 미국, 영국 등과는 달리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의 점령정책과 연관된 대외원조에 의존한 구호품의 보급통로로서의 민간보육 시설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 시기 뉴딜(New Deal) 정책론자들이 주류를 이룬 연합국점령정부(SCAF)는 미 본토에서 보다 더욱 진보적인 포괄적 아동복지법을 제정토록 일본정부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 최소한 법규정에 있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률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 정부의 자의적 법해석과 행정적 책임기피로 보육시설은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단순한 빈민아동구제, 자선단체로서의 기능밖에는 수행하지 못했고 그 규모도 더 이상 팽창하지 못했다. 보육원의 생활면에서도 이 시기에는 ‘탁아’ ‘탁아소’란 말의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란 어른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며 ‘보육’ ‘보육원’이란 용어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었고, 군국주의 교육의 침병이었던 과거에 대한 비판도 높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을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기 개발되었던 집단적 질서훈련, 예절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여전히 보육원내의 일상생활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급격한 전기가 마련된 것은 경제개발의 결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이 팽창하여 단순저임금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외국인 노동력을 대량수입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정부와 보수적 정치세력은 산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대신 여성노동력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기혼여성집단을 산업예비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때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는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5개년 발전계획과 대량의 공공투자를 제창하고 각 지방정부도 지역복지시설의 확충이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공동육아시설의 팽창기에도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의 공동육아시설의 균형적 발전을 꾀한 것은 아니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기혼여성 노동력의 확보 이외에 아동의 초기사회화 기관으로서의 보육원의 시설과 질적 내용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정치상황에 따라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지역단위의 정치적 결정과정,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까지 영향을 미친 대규모로 조직화된 보육운동의 역할과 혁신정치를 표방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적 기능을 몇 가지 실례를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후의 일본사회에는 보다 포괄적인 공동육아제도건설을 요구하는 정치적 투쟁과 공공집회가 어느 선진산업사회보다도 많았다. 많은 여성단체들, 특히 혁신적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들은 국가차원의 정책결정과정부터 지역차원의 실천까지 공동육아제도의 진화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그 진로를 바꾸어 놓기도 했다. 오늘날 일본의 공동육아제도에서 볼 수 있는 진보적 요소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일공동육아제도 같은 일본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대립되는 새로운 제도가 폭넓게 성립되는 과정을 국가관료체제의 기계적 정책수행의 결과라거나, 경제성장의 부수적 파생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가두시위와 농성과 모금, 서명운동과 선거참여 또한 법정소송까지, 일하는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사회적, 정치적 투쟁은 일본의 공동육아제도의 성립과 그 성격 결정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사회적 변수였다(Chung 1992).

일반적으로 ‘보육운동(호이꾸운도오)’이라고 하는, 주로 공산당과 사회당 등의 혁신정당들과 연대해서 전개된 좌파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주민운동의 요구는 시기에 따라 크게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우체통 수만큼 많은 보육원 건설’을 요구하는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요구하는 운동이고, 둘째는 보육원에 있는 취업여성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전업주부의 어린이들에 비해 결코 열악한 물리적 환경, 교육적 조건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육원 시설과 보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운동이었다.

보육운동단체들은 법에 명시된 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러한 요구는 시민적 권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즉 일반사회의 지배적 사고방식인 가정과 개인에 귀속된 문제로서의 육아에서 ‘공공의 책임’으로서 ‘육아의 사회화’를 요구하였다. 한편으로는 여성노동 인력동원을 위해 공동육아시설의 확충을 권장하면서도,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직접 담당하여야 하는 정부측으로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법해석을 극소화함으로써 가능한 한 취업여성의 육아를 사적 영역에 맡기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수많은 보육운동의 사례중 오오사카(大阪)시의 한 위성도시인 수이따(吹田)시에서의 주민운동의 경험은 이러한 보육운동의 정치화 과정을 보여 주는 하나의 전형적 예다. 1970년 어느날 수이따 시청앞에서 영아들을 위한 공동육아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어머니들과 보육원 종사자들의 시위대에게 수이따시의 시장이 당시의 보수적 정치인들 및 행정관료들의 본심을 토로하는 폭언을 하였다. “자기 맘대로 애들을 낳고 그 엉덩이를 시청에 나대는가(캣테니 코도모오 운데 소노 오시리오 시니 야라세루나)(大阪保育研究所 1986b : 18)”. 모욕을 당한 어머니들과 보모들은 즉각 시청 복도에 간이영아원을 만들어 놓고 시장실 문앞에서 기저귀를 말리는 등 수일간에 걸친 농성을 시작하였다. 몇몇은 가두방송차를 빌려서 전 시가를 돌아다니며 시장의 폭언과 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알렸다. 이듬해 열린 시장선거에서는 이들 어머니들의 가가호호 방문 등의 낮밤없는 적극적 선거운동에 힘입은 무명의 보육운동지도자가 폭언을 한 시장의 연임을 막고 새로운 시장에 당선되었다(大阪保育研究所, 1986b : 17-19).

이렇게 공동육아에 대한 요구가 조직화되었을 때 이는 시정촌(市町村: 시초오손) 단위뿐만 아니라 현(縣: 켄) 단위의 지역정치차원에서까지 커다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였고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걸쳐서 혁신지방자치정부시대라고까지 할 정도로 혁신정당들이 지역정치에

대두하는 한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보육운동을 위시한 다양한 주민운동의 힘으로 성립된 혁신지방자치정부는 보육원시설의 확보와 그 질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곧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로 법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정치적 갈등, 경쟁의 국면을 맞는다. 실례로, 역시 오오사카의 위성도시인 셋츠(瀬津)시 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시정부가 마련한 보육시설수준에 걸맞는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셋츠시정부 대 일본중앙정부: 1973~76)을 제기한 바 있다(정병호 1992).

일본의 보육운동에서 정치적 투쟁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행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육아’가 영리추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자구적 노력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보육원’(쿄오도오 호이꾸엔)이라 불리우는 무인가 비영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는데, 각 지역의 일하는 어머니들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재 2,500여개 정도되는 이러한 자발적 보육시설의 존재가 공동육아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팽창하던 60년대 후반과 70년대의 전 시기에 걸쳐서 ‘육아’에 대한 영리적 사업의 접근을 막아 왔다. 현재 450개 정도 있다고 추정되는 영리적 무인가 보육시설들은 ‘베이비 호텔루’(baby hotel)이라고 불리우며 그 시설이 역시 무인가인 비영리 ‘공동보육원’보다 좋은 경우라도 아동의 복지적 측면이나 교육적 내용에 있어서 일종의 사회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사회적 육아에 대한 영리적 접근을 경계하는 보육운동의 노력은 그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혁신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사회적 육아는 하나의 시민적 권리로 생각하고, 공동육아제도는 단순히 결핍을 보완하는 사회복지적 장치가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단절되고 가치저하되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좁게는 보다 많은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의식강화를 도모한다는 정치적 목표와 더불어

넓게는 다양한 개인들이 육아라는 공통의 목표로 만나 연계망을 형성하고 재사회화되어 다른 본질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시하였다.

실제로 혁신적 보육운동의 초점이 초기의 직장보육원 설립에서 공동보육원으로, 다시 지역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많은 공립보육원 설립과 ‘학동보육’(가꾸도오 호이꾸 : 국민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공동육아의 ‘공공성’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보육은 시민적 권리’라는 개념이 폭넓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역시 70년대 초기 오오사카 시장이 한 무인가 공동보육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한 어머니를 “훌륭하다”(에라이)고 치하하자 그 어머니는 특 쏘는 말로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곳의 우리 일도 대단할 게 없어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형편없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大阪保育研究所 1986a : 51)라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일본여성 특히 일본의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그들의 확고한 사회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공동보육원’뿐만 아니라 혁신적 보육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일본의 보육원에서는 공동육아문제를 통해 재사회화되고 조직화된 정치적으로 의식있는 부모들이 핵발전소, 환경오염 등에 반대하고, 무농약, 무공해 식품을 공동구매하기도 하고, 지역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위한 주민운동을 선도하는 등 ‘지역주민운동의 요새’(토리데)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운동의 선진지역’ 보육원에서 있었던 소비세반대운동(1989), 걸프전반대 평화시위(1991), 자위대 해외파병 반대(1991~92) 등의 지역문제를 넘어선 국가차원의 정치참여를 보면 보육원을 통해서 사회적 육아과정과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른들, 특히 젊은 부모들의 정치화의 폭은 넓다고 하겠다.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형태로 펼쳐지는 어른들의 정치화는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배문화가 규정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규범,

가치관, 관습과는 아주 대립되는 생활경험을 내면화하는 어린이들의 사회화로 이어진다. 이는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실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진보적, 자연주의적 교육이념 및 인간관계를 보육원의 일상생활의 내용 속에 구체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위에 언급한 정치적 대립, 갈등을 겪으며 성장한 일본의 공동육아제도안에서는 다른 사회 같으면 고립된 급진교육론자들이나 몇몇 개인의 실험적 모델에 지나지 않았을 진보적, 자연주의적 프로그램들이 보육운동단체들의 전국적 연계망과 재교육과정을 통해 대규모로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운동을 통하여 장기적(혹은 본질적)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보육원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적’ 보육원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의례화된(ritualized) 집단적 활동에 저항하여 아동 하나하나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원의 일과시간표까지 없앨 정도의 급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한편의 보육원에서는 영아기부터 매일 수차례 줄서고, 일제히 용변을 보고, 똑같은 인사법과 공식화된 예절교육을 되풀이 받으며, 모두가 같은 노래, 같은 동작을 함께 하며, 남자와 여자아이의 장난감과 놀이가 구별되고, 내 집단과 다른 집단이 매일의 경쟁을 통해 확인되고, 어른과 아이, 나이 많은 아이와 적은 아이간의 위계질서가 되풀이 확인되고, 실내와 실외, 교실과 복도에서의 의복과 동작이 확연히 달라야한다는 것을 내면화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지배문화, 지배이데올로기의 획일적 재생산구조라고 비판하며 하루종일 줄서는 일이 없이, 실내와 실외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예절교육과 존대말 훈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어른 아이가 서로 반말하고 싸우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자유놀이로 구성되어 있고, 놀이 중에 남자, 여자아이가 늘 함께 섞여 있는, 즉 혁신적 가치관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토빈(Tobin 1989)은 전자의 공동육아방식을 ‘일본적’이라고 보았고 후자의 교육적 가치관을 ‘서구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보육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대립적 가치관을 일본적/서구적 혹은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이분관계로 보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혁신적 보육운동이 표방하는 이상이 일본의 전통적 육아방식 특히 공동체적 마을에서의 ‘어린이상’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과 함께 놀며 주체적으로 사물을 배워 나가는 사회화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이상이 많은 부모들에게는 ‘7세 이전의 아이는 신에게 속한다’(Iijima 1987)는 전통적 믿음에 기초한 현세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어린시절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적 상식에 기초한 보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에노(Ueno 1987)가 전국민의 사무라이화(Samuraization)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우리가 ‘일본적’ 혹은 ‘전통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회문화적 관습들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식적 교육기관을 통해 주입된 지배권력의 정치이데올로기의 표현일 경우가 많다. 보육원도 하나의 새로운 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을 염두에 두고 보면 토빈(Tobin)이 ‘일본적’이라고 부른 전자의 보육방식에 대해 로렌(Rohlen 1989)이 현대 일본사회의 어른들의 조직체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통제방식(social control mechanism)이 나이 어린 아이들의 초기 사회화 매개체에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한 지적은 많은 공동육아시설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끌지 않으면서 행해지고 있는 획일적 보육방식의 정치적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에서 진보적 혹은 자유주의적 보육이념과 그 실천은 이러한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적 재생산 과정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한 표현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문화(혹은 대안적 문화)의 속성을 많이 갖는다.

여기서 이들이 채택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자연주

의적 보육 모델들이 사실은 현대 일본사회의 계급, 민족, 성 차별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가치관과 행태를 몸으로 내면화한 미래의 세대를 기르고자 하는 정치적 기대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전통적 민중문화에서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공동육아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4. 맺음말

일본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표방하는 동일성(homogeneity)의 신화 밑에서,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초기사회화과정이 기혼여성 노동에 대한 법적, 정치적 정의에 따라 보육원과 유치원으로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고, 그 어느 한 쪽에 적극적 의미를 두는 정치집단과 사회집단들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 및 가치관과 미래관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場은 시정촌(市町村: 시초 오손)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정치적 결정과정이었고 이는 곧 현(縣: 켄) 단위의 다양한 육아현실을 빚어 내었다. 이러한 좁은 지역사회 단위의 정치적 결정과정에는 보육원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화되고 조직화된 주민운동의 힘 즉 정치적 의식이 고양된 젊은 부모들(특히 일하는 어머니들)의 참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오늘날 일본사회의 혁신적 정치세력중 지역사회에 가장 잘 뿌리내린 집단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지배적 가치관은 여전히 가정에서의 영·유아보육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본 것처럼 일본사회는 지난 30년 동안에 어머니들이 가정 밖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공동육아제도를 확립하였다. 종일공동육아제도는 최소한 네 명중 한 명의 일본어린이들에게 대안적 사회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곳에서 어린이들은 일본사회가 표방하는 표준적 문화와는 대립되는 초기사회화 경

협을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적 초기사회화 기관으로서 일본의 보육원은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주요한 정치투쟁의 장이 되었다. 수 많은 보육원에서 관료적 사회통제 방식이 저연령층의 일상생활에까지 확산되고 지배문화의 획일적 전파가 이루어지는 한편, 다른 많은 보육원에서는 대안적 저항문화가 혁신적 보육운동조직을 통해 확산되고 프로그램화되어 본질적 문화변혁,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미래의 세대에 심고 있다.

참고문헌

정병호

- 1991 “탁아소: 삶의 방식을 익히는 곳,”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편,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출판사.
1992 “여성노동시장수요와 공동육아(탁아)제도: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3집: 227-244.

大阪保育研究所

- 1986a 『證言でつづる大阪保育運動の歴史 I』, あゆみ出版.
1986b 『證言でつづる大阪保育運動の歴史 II』, あゆみ出版.

保育問題をすすめる會

- 1974 『沖繩のこども』, 沖繩縣 保育問題をすすめる會.

幼兒保育研究會

- 1989 『最新保育資料集』, ミネルヴァ書房.

全國保育團體連合會

- 1989 『保育白書』, 草土文化.

Caudill, William and Helen Weinstein

- 1969 “Maternal Care and Infant Behavior in Japan and America,” *Psychiatry*, 32, 12-43.

Chung, Byung-Ho

- 1992 *Childcare Politics: Life and Power in Japanese Day Care Center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Doi, Takeo

- 1971 *The Anatomy of Dependence*, Kodansha, Tokyo.

Iijima, Yoshiharu

- 1987 “Folk Culture and the Liminality of Children,” *Current Anthropology*, vol. 28, no. 4, (Aug.-Oct. 1987) : pp.41-48.

Lebra, Sugiyama Takie

- 1976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Hawaii.

Rohlen, Thomas, P.

1989 "Order in Japanese Society: Attachment, Authority, and Routine,"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5, no. 1, (Winter 1989) : pp.5
-40.

Tobin, Joseph, J., David Y. H. Wu, and Dana H. Davidson

1989 *Preschool in Three Cultures: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Yale University Press.

Ueno, Chizuko

1987 "The Position of Japanese Women Reconsidered," *Current An-
thropology*, vol. 28, no. 4, (Aug.~Oct. 1987) : pp.75-84.